

“전남광주 행정통합, 장애인 정책 ‘새 기준’ 마련돼야”

광주장차원 등 활동가 300여명
유스퀘어-시청 약 3km 시가행진
이동권·노동권·정책 참여 등 촉구



오는 6·3 지방선거와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장애인들과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권리 증진을 요구했다. /조영권 기자

“전남 광주행정통합으로 장애인 정책의 새 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장애인들과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권리 증진을 요구했다.

29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 만남의 광장에서 전남장애인철폐연대와 광주420공동투쟁단 주최로 시가행진이 시작됐다.

이날 행진에는 광주 전남 지역 내 장애인단체 활동가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관계자, 일반 시민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

선두에 선 비장애인 활동가들은 ‘장애인은 시민이다.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든 채 경찰의 통제하에 발걸음을 옮겼다.

현수막 뒤에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섰다. 이 중에는 전동이 아닌 일반 휠체어 이용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직접 바퀴를 굴리는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함께했다.

기차역과 계수 시청사거리를 거쳐 광주시청으로 이동하는 약 3km의 행진 동안 참여자들은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법제화하라”, “장애인의 보

편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지체 장애로 목소리를 내는 게 어려운 이들은 행진 대오의 외침과 같은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머리 위로 들어 뜻을 표현하는 데 동참했다. 비장애인 참여자들은 약 1시간30분간 직접 바퀴를 굴리다 지친 이들을 대신해 휠체어를 끌어

주거나 도로 위 돌부리에 걸리지 않도록 이를 치워주는 등 함께 사는 세상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정오가 조금 지나 광주시청 정문 앞 광장에 도착한 이들은 대오를 유지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행진 출발 전보다 많이 지친 모습이었지만, 여느 때보다 힘이 실린 목소리로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보장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평생교육·건강권·통합지원 보장 ▲정책 수립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정성주 광주장애인차별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통합이 단순한 결합에 그치지 않아야 정책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여전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데다 공공일자리에는 장애인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모든 문제는 개별 사안이 아닌 지금껏 광주시가 어떻게 장애인 정책을 다뤄왔는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열변했다.

김정 전남장애인차별연대 상임대표는 “한 식구로 묶인 만큼 그에 맞는 예산과 정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는 염원이 지난주 통과된 만큼 이제는 장애인들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서형우 기자

檢,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50대에 징역 1년 구형

나주 소재 벽돌공장서 운전자로 일해
‘괴롭힘 미방치’ 법인엔 벌금 500만원
혐의 인정·선처 호소...내달 27일 선고

검찰이 작업이 서툰다는 이유로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가혹 행위를 한 내국인 직장 동료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9일 특수 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나주 소재 벽돌공장 법인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서 지게차 운전자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2월 스페인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B(30대)씨가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벽돌 무더기와 함께 비닐랩으로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벽돌공장 법인은 A씨의 고용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 소재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B씨가 노동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재명 대통령도 범행 당시 영상을 보고선 인권침해를 엄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A씨 등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곧바로 이어진 결심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우발적 사건이었고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인의 대리인도 “이 사건 이후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외국인도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이 존중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A씨와 법인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한편 B씨의 구제에 함께했던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검찰의 구형에 대해 ‘고작’이라는 표현으로 형량의 가벼움을 지적했으며 재판부에는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안재영 기자

‘중대재해처사’ 제조업체 임원진 재판대에

작업대 전도 사고로 2명이 죽고 1명이 다친 담양 한 제조업체의 임원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을 위반(산업재해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담양 한 제조업체 대표 A

씨와 이사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이 속한 법인에선 2024년 10월1일 작업대 전도 사고로 필리핀 국적 근로자 1명 등 2명이 사망했고 또 다른 직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넘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막 없이 약 8m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발생했는데, 수사 기관은 법인과 임원진인 피고인들이

산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며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하며 법인을 상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이들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안재영 기자

‘해든이 살해’ 친모, 1심 무기징역 ‘불복’

양형 부당 등 추정...검찰도 항소

2심 재판은 광주고등법원서 예정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해든이(가명) 사건’의 친모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별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0대)씨는 전남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 등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검찰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확한 사유와 대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검찰은 A씨의 남편 B(30대)씨에 대해 구형한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한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된 만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항소심은 조만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43분께 여수시 소재 자택에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그는 같은 해 8월24일부터 10월21일까지 19회에 걸쳐 아들을 학대한 행위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A씨가 아들에게 학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참 고인을 상대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아동유기·방임) 등으로 기소됐는데, 구형의 절반도 안 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안재영 기자

전동휠체어 탄 80대女 SUV에 치어 숨져

함평 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80대가 차량에 치어 숨졌다.

29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 오전 9시40분께 함평군 나산면 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 이용자 A(80대·여)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커브길을 무단횡단해서 지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SUV 운전자 B(60대·여)씨는 음주나 무면허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찬용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